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박선경 | 인천대학교**

이내영 | 고려대학교***

| 국문요약 |

경제적 불평등 악화라는 객관적 거시경제상황은 어떤 논리적 세부단계를 거쳐서 개인의 복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2000년대 이후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불평등이 개인의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별로 세분화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불평등 악화가 개인의 복지선호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세분화하여 한국인의 복지선호를 다음의 네 가지로 유형화한다. 첫 번째 유형은 객관적 경제지표와 별개로 불평등 악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적 선호유지자이다. 두 번째 유형은 불평등의 악화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이다. 세 번째 유형은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고 이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복지확대로 인한 세금부담 때문에 복지를 반대하는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이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것이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복지확대로 인한 세금확대까지 찬성하는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이다. 한국복지패널 제 5차(2010년), 8차(2013년), 11차(2016년) 조사의 부가조사 원자료를 사용해서 이 네 가지 복지선호유형을 정량적으로 정의하고 유형별 빈도와 추세를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의 경제상황가설, 거시적 경제불평등정도 가설, 정치성향 가설을 통해, 네 가지 유형에 대한 로짓분석을 시행하여 세부적인 복지선호유형의 이질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복지선호, 경제적 불평등, 복지선호 유형화, 한국복지패널조사

* 이 논문은 2016년 고려대학교에서 지원된 교내연구교원 지원사업의 연구비로 수행되었다. 논문의 초고에 대해 귀중한 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제1저자.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skpark@inu.ac.kr).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nylee@korea.ac.kr).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형성 과정을 세분화하여 복지선호의 성격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소득불평등과 자산불평등이 함께 악화되고 있는 2000년대 이후 불평등 추세를 감안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유권자의 정책선호에 매우 강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인들의 불평등과 관련된 정책선호를 연구한 기존연구들은 이러한 짐작과는 반대의 결과를 더 많이 보여준다. 급속한 경제적 불평등 심화추세에도 불구하고 재분배지지 여론이 낮으며(이보윤·김동훈 2015), 복지확대정책이 주요 선거이슈로 작동하지 않거나(신진욱 2015; 이현경·권혁용 2016), 계급균열로 이어지지 않았다(신진욱 2017).

2000년대 이후 경제적 불평등 수치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평등이 정책 선호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가? 본 연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탐색적 과정으로, 불평등이라는 국가 차원의 객관적 경제상황이 개인의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세분화(disaggregate)하고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거시적 경제상황이 복지지지라는 개인적 정책선호로 연결되는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으며, 동질적이지 않다. 거시경제상황에서 개인의 정책선호까지 여러 단계의 인지와 판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단선적이지 않다는 뜻이며, 이러한 여러 단계의 인지와 판단의 과정이 유권자마다 다르다는 점에서 동질적이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각 단계에서 누가 어떤 선호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세분화해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객관적 경제지표 상으로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런 객관적 경제상황을 유권자 개인이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지확대에 반대하는가? 혹은 불평등 심화를 체감하고 있지만, 이 문제 자체가 정부가 개입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복지확대에 반대하는가? 혹은 불평등심화도 체감하고 있고 이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원론적으로는 생각하지만 이를 위한 세금증가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복지확대를 반대하는가?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객관적 경제상황이 개인의 복지선호라는 주관적 정책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질문들과 현상들이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인의 복지선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이런 중첩적인 질문들을 구분하지 않고 있어서 불평등의 정치적 효과가 왜 제한적인지 엄밀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제 5차(2010년), 8차(2013년), 11차(2016년) 조사의 부가조사 원자료를 사용해서 첫째, 복지선호 형성의 세부 단계를 유형화하여 과연 어느 단계에서 반복지 혹은 친복지여론이 주로 형성되는지 확인하고, 둘째, 세부 유형별로 응답자들의 특성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반복지여론의 원인을 찾자 한다.

후술하겠지만 간략히 복지선호의 네 가지 유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형은 불평등 악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응답자(현상적 선호유지자)이며, 그 비율은 3개년도를 통틀어 9.78%으로 가장 낮았다. 두 번째 유형은 불평등 악화를 인지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 유형으로 3개년도를 합한 전체 응답자의 26.28%이다. 세 번째 유형은 불평등 악화를 인지하고 이를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를 위한 증세에 반대하는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로, 3개년도를 합한 전체 응답자의 36.28%이다. 마지막 네 번째 유형은 불평등 악화를 인지하고 정부가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증세도 지지하는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로서 3개년도를 합한 전체 응답자의 27.66%이다.

복지선호형성 단계를 이렇게 유형화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복지선호의 고전적 이론(Meltzer and Richards 1981)에 따르면 불평등 악화는 복지정책에 대한 여론의 우호적 지지를 만들어야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한국의 정치경제분야의 주요 퍼즐 중 하

나였다. 본 논문은 불평등이 복지선호에 이르는 과정을 세분화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반복지여론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지 설명할 수 있고 이는 위의 주요 퍼즐을 풀 수 있는 첫 디딤돌이 될 것이다.

또한, 친복지적 여론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혹은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도 있다. 만약 한국인의 반복지여론이 높은 이유가 시민들이 불평등 악화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서라면,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해 정보부족을 수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개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라면, 반복지여론은 단기간에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를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세금확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복지확대에 유보적인 시민들이 다수라면, 불평등에 대한 객관적 정보 혹은 복지정책내용에 대한 정보제공보다는 복지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제시하거나, 복지비용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끄는 등의 전략과 정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장에서 이론적 배경에 대한 논의를 다루고 3장에서 유형화를 위한 이론틀을 설명한 이후, 4장의 경험분석 부분에서 후술하도록 하겠다.

II. 기존연구검토

유권자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는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다. 복지선호에 대한 기존연구들을 보면 인구학적 조건, 당파성, 개인의 경제적 상태, 국가적 경제 상황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첫째, 세대, 성별, 인종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수는 한 개인의 정책선호를 결정 짓는 기본적인 조건으로 작용한다. 한국인의 복지선호에 한정해서 본다면, 다수

의 연구들이 연령 혹은 세대가 유의미한 변수임을 공통적으로 발견했다. 김영순·노정호(2017)의 지적처럼 초기의 정량적 연구들은 통제변수로서 연령을 분석모델에 포함한 후 연령의 유의미한 효과를 확인하는 정도였지만, 최근 한국사회의 세대갈등이 심화되는 추세에 맞춰, 복지문제에 대한 세대 간 선호차이를 본격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영순·노정호 2017; 박길성 2011; 이상록·김형관 2013).

둘째, 복지선호에 대한 정치심리학적 설명에 따르면, 이념이나 정당지지 같은 당파적 변수가 큰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 대한 기존연구들도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혹은 진보적 성향의 정당을 지지할수록 복지확대에 우호적이고, 보수적 이념을 가지고 있거나 보수정당지지자일수록 복지확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김운태 외 2013; 서복경·황아란 2012; 주은선·백정미 2007; 최유석 2011).

셋째, 복지정책의 재분배적 성격때문에 개인의 소득수준, 자산정도, 복지수혜 경험 등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황이 복지선호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불평등과 재분배선호의 고전적 연구인 멜처-리처드 모델(Meltzer and Richards 1981)에 따르면 중위수 유권자(median incomer)의 소득과 평균소득 유권자(mean incomer)의 소득 간 격차가 커질 때 중위수 유권자는 증가한 소득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재분배 정책을 지지한다. 즉,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저소득층 수혜자 집단이 복지확대를 지지하는 반면, 복지확대로 인해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거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고소득층 기여자 집단이 복지 확대를 반대하는 방식으로 자기이해(self-interest)적 복지선호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한국인의 경제상황에 따른 자기이해적 복지선호는 고전적인 이론적 기대와 다른 양상이다. 저소득층일수록 복지확대를 지지한다는 연구(김운태·유승호·이훈희 2013; 김희자 2013; 이현우 2013; 주은선·백정미 2007)도 있지만, 고소득층이 복지확대를 더 지지한다거나(류만희·최영 2009), 소득과 재분배선호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는 연구

들(김영순·여유진 2011; 모지환·김행열 2009)도 있다. 이는 소위 ‘계급배반적 투표행위’와 그 맥락을 같이 하는 현상으로 왜 한국의 저소득층이 보수적인 투표행태와 정책선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강원택 2013; 강희경 2016; 박선경 2017a; 오수진·박상훈·이재묵 2017; 한귀영 2013).

자기이해와 관련된 또 다른 연구들은 복지 비용에 대한 부담 혹은 비용회피적 성향을 지적한다(김사현 2015; 김영순·여유진 2011; 최균·류진석 2000). 예를 들어 최균·류진석(2000)은 한국인들이 복지책임주체를 국가로 생각하지만 복지 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에는 소극적임을 발견하고 이를 복지 의식의 이중성이라고 지칭했다. 김사현(2015) 역시 복지 확대는 지지하지만 비용 지불에는 소극적인 복지비용회피적 태도 불일치를 확인하고 이 원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김영순·여유진(2011)의 연구 역시 복지태도의 비일관성을 확인하면서 비일관적 태도가 하층계급에서 더 많이 발견됨을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경제적 상황이 아닌 거시적 경제상황이 중요하다는 연구들이 있다. 크게 보면 일종의 경제투표(economic voting) 중 사회지향적 투표(sociotropic voting)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국가 전체의 경제상황이 좋을 때 복지확대에 우호적이라거나, 실업률이 높거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었을 때 복지확대 지지여론이 증가할 것이라는 이론적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2000년대 초반 이후 한국의 경제불평등이 꾸준히 악화되었기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시민들의 정치적 선호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가능하다. 그러나 이현경·권혁용(2016, 93)의 연구가 지적하듯이 불평등이 시민들의 정치행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예외적으로 이현경·권혁용(2016)의 연구가 2003년 이후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추세와 소득계층화(income stratification)변수를 비교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기존의 한국정치에서 유의미하지 않던 소득계층이 정당지지나 투표선택의 유의미한 변수로 작동하였는지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저소득계층일수록 불평등이 가장 심했던 2008년에 보수정당을 지지했고 2007년 대선투표 역시 비슷했으나, 세대

변수를 포함시켰을 때 소득계층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져서, 소득계층변수 효과의 제한적 영향력을 확인하는 발견에 그쳤다.

이현경·권혁용(2016) 연구의 적절한 문제제기와 엄밀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해진 불평등이슈가 유권자의 선호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충분한 객관적 경제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정치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은 다소 의외이다. 이러한 퍼즐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연구질문을 파생시키는데, 첫째, 세대효과와 경제적 불평등 효과의 중첩성이라거나 정부 불신의 매개 효과 등 제 3의 변수를 확인하여 논의를 외재적으로 확장시키는 방향의 연구가 가능하다. 둘째는 이론의 논리적 전제들을 세분화하여 논의의 내재적 타당성을 담보해나가는 방식이다. 본 연구는 이 중 두 번째 방향을 선택하여, 불평등이라는 객관적 경제상황이 주관적 정책선호로 연결되는 세부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퍼즐을 풀 수 있는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III. 이론틀: 복지선호의 유형화

경제 불평등의 악화라는 객관적 거시경제조건 변화는 어떤 세부적 단계를 거쳐서 개인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로 연결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아래 그림1처럼 시민들의 복지선호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단계별로 세분화하여 묘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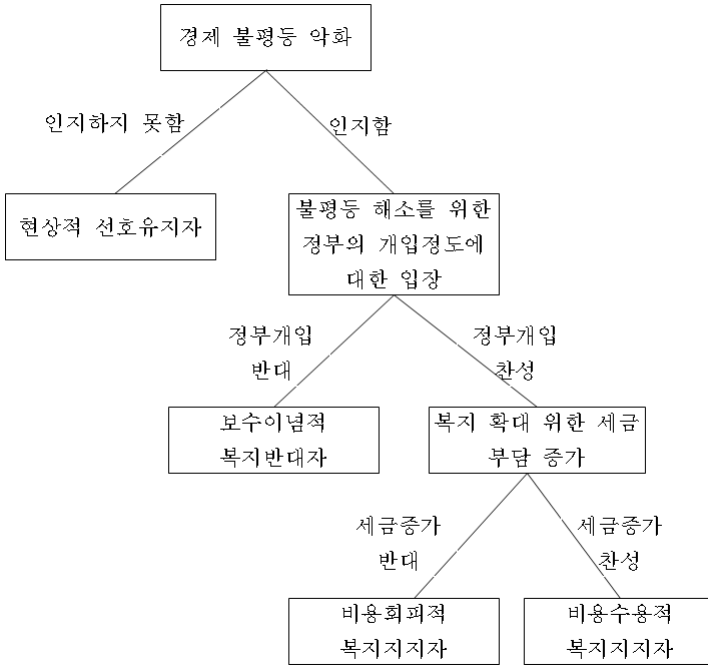
첫째, 시민들은 경제적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가? 객관적 경제지표 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추세와 별개로, 이를 시민들이 인지하는지 아닌지는 경험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국가의 객관적 경제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개인의 경제상황에 따라 불평등을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경제투표이론에서 말하듯이 모든

객관적 경제지표가 중요한 선거이슈로 부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Lewis-Beck and Stregmaier 2000), 경제적 불평등 이슈 역시 모든 시민들에게 동등한 강도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객관적 수치상의 불평등 악화와 별개로 이를 중요한 사회문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혹은 인지하지 않는) 시민들은 기존의 선호를 유지할 것이다. 편의상 이들을 현상적 선호유지자 혹은 제1유형이라고 명명하자.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추세를 인지하는 시민이라면, 두 번째 단계로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 판단할 것이다. 이념형성에 대한 고전적 이론들이 주장하듯이,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정도에 대한 찬반여부는 좌우이념을 형성하는 일차적이면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Poole and Rosenthal 2007). 불평등이 악화되고 있음을 알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보수적인 사람들은 불평등 악화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복지확대를 반대할 것이다. 편의상 이들을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 혹은 제2유형이라고 지칭하자.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찬성한다면 이론적으로 이들은 복지지지자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세 번째 분류가 필요하다. 한국인의 복지선호를 다룬 기존의 연구들 중 다수가, 복지확대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그로 인한 세금부담은 피하고자 하는 이중적인 복지태도를 확인한 바 있기 때문이다(김사현 2015; 김영순·여유진 2011; 최균·류진석 2000). 그러므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개입에 찬성하는 이들 중에서 복지에 따른 증세 여부를 고려한 의견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 악화를 인식하고 복지정책 확대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증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은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제3유형)라고 유형화할 수 있다. 반대로, 불평등 악화를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개입에 찬성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 역시 찬성하는 이들을 최종적으로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제4유형)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림 1〉 불평등과 복지선호형성의 유형화



IV. 경험적 분석

1. 유형화의 정량적 측정

그림1의 단계에 따라 현상적 선호유지자,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 그리고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라는 총 네 가지의 복지선호유형이

도출된다. 각 유형별 빈도와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를 활용한 정량적 분석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그림1의 유형화 과정에서 사용된 세 가지 종류의 복지 관련 문항을 모두 가지고 있는 한국복지패널조사의 부가조사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세 가지 문항 모두 제 5차(2010년), 8차(2013년), 11차(2016년) 조사의 부가조사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비록 그 시기가 짧긴 하지만 일회성 조사와 다르게 시간에 따른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구체적으로 유형화를 위해 사용된 설문문항은 다음과 같다.

문 4)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㉞우리나라는 소득격차가 너무 크다. ①매우 동의한다, ②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문 4)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㉞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다. ①매우 동의한다, ②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문9) 귀하는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㉞사회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①매우 동의한다, ②동의한다, ③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반대한다, ⑤매우 반대한다.

위 세 문항을 이용해서 네 가지 복지선호유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것이다. 첫 번째 문항인 문4-㉞에서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즉, 문4-㉞에 ‘③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반대한다’, 혹은 ‘⑤매우 반대한다’

라고 응답한 사람)를 제1유형인 현상적 선호유지자라고 정의할 것이다.

첫 번째 문항에서 소득격차가 크다고 생각한 응답자(즉, 문4-㉗에 ‘①매우 동의한다’ 혹은 ‘②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 중 두 번째 문항인 문4-㉘에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즉, 문4-㉘에 ‘③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반대한다’, 혹은 ‘⑤매우 반대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를 제2유형인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로 정의할 것이다.

문4-㉗에서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에 동의했고 문4-㉘에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세 번째 문항인 문9-㉘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증가에 반대한 응답자(즉, 문9-㉘에 ‘③동의도 반대도 하지 않는다’, ‘④반대한다’, 혹은 ‘⑤매우 반대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를 제3유형인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로 정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4-㉗에서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에 동의하고 문4-㉘에서 소득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세 번째 문항인 문9-㉘에서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증가에 찬성한 응답자(즉, 문9-㉘에 ‘①매우 동의한다’, 혹은 ‘②동의한다’라고 응답한 사람)를 제4유형인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로 정의할 것이다.

표1은 각 유형의 빈도와 비율을 연도별로 표시한 것이고, 그림2은 네 가지 유형의 연도별 비율을 보여주는 추세선이다. 표1과 그림2에서 보듯이 현상적 선호유지자는 2010년 조사응답자 총 2,071명 중 180명(8.69%), 2013년 조사응답자 총 3,872명 중 382명(9.87%), 2016년 조사응답자 총 3,421명 중 354명(10.35%)이다. 3개년도 모두에서 제일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기에 따라 그 상대적 비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제2유형인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는 2010년 조사응답자 총 2,071명 중 533명(25.74%), 2013년 조사응답자 총 3,872명 중 1,059명(27.35%), 2016년 조사응답자 총 3,421명 중 869명(25.4%)이다. 3개년도 모두 비슷하게 응답자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제3유형인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는 2010년 조사응답자 총 2,071명 중 769명 (37.13%), 2013년 조사응답자 총 3,872명 중 1,148명(29.64%), 2016년 조사응답자 총 3,421명 중 1,480명(43.26%)이다. 2010년도와 2016년도 각각 네 가지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유형이며, 특히 2016년도에는 무려 43.26%, 즉 절반이 약간 못 미치는 응답자들이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유형이다.

마지막으로 제4유형인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는 2010년 조사응답자 총 2,071명 중 589명(28.44%), 2013년 조사응답자 총 3,872명 중 1,283명(33.14%), 2016년 조사응답자 총 3,421명 중 718명(20.99%)이다. 2013년도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고, 2010년도에는 제3유형에 이어 두 번째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2016년도에는 제3유형과 제2유형보다도 더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 복지유형별 응답자 빈도와 비율

	2010년	2013년	2016년	합계
현상적 선호유지자	180명 (8.69%)	382명 (9.87%)	354명 (10.35%)	916명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	533명 (25.74%)	1,059명 (27.35%)	869명 (25.4%)	2,461명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	769명 (37.13%)	1,148명 (29.64%)	1,480명 (43.26%)	3,697명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	589명 (28.44%)	1,283명 (33.14%)	718명 (20.99%)	2,590명
합계	2,071명	3,872명	3,421명	

유형별 응답자 비율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크게 제1유형과 제2유형을 복지반대의견으로 보고 제3유형과 제4유형을 복지찬성의견으로 이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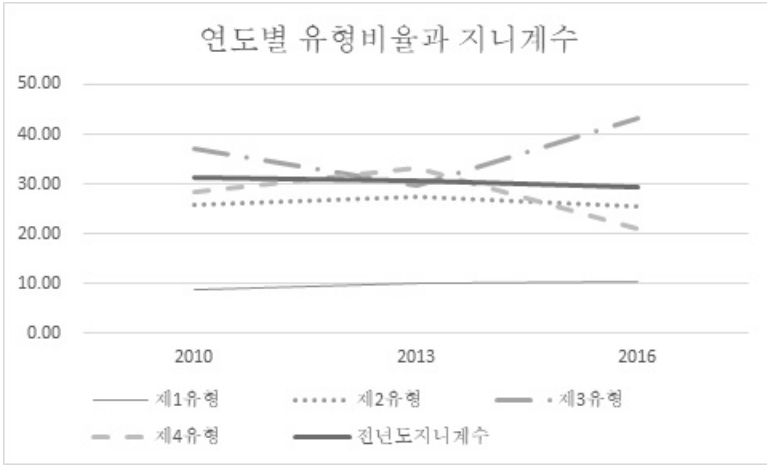
법적으로 본다면, 3개년도 모두에서 복지찬성의견이 대략 65% 정도이고 복지반대의견이 대략 35% 정도이다.

둘째,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보다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가 항상 많은 것 또한 흥미롭다. 즉, 서구의 보수적인 경제이념처럼 소득격차문제와 같은 경제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기 보다, 원론적으로 소득격차를 국가가 해결했으면 하지만 그를 위한 개인의 비용부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다. 이는 한국인들의 복지태도가 비일관적이며 모순적이라는 기존의 연구들(김사현 2015; 김영순·여유진 2011; 박선경 2017b; 최균·류진석 2000)과 상통하는 결과이다.

3개년도의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추이변화를 비교할 수 있다. 경제적 불평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제1유형 현상적 선호유지자만 3개년도 모두에서 변화없이 10%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세 개의 유형은 연도별로 그 비율이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불평등의 변화가 유형의 비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림2에서 소득불평등 지수인 지니계수를 파란색 굵은 선으로 표시했다. 그림 2의 지니계수는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것이며, 설문조사 시행 기준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였다. 2009년도 지니계수는 31.4, 2012년도는 30.7, 2015년도는 29.5로서, 2009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는 지니계수가 조금씩 떨어지는 추세이다. 물론 조사시기가 짧아 장기적인 변화추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008년의 최고점 이후 불평등 정도가 조금씩 완화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이에 따라 제4유형인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의 비율이 떨어진 것이라고 간접적으로 추론해볼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유형비율과 지니계수



통계적 경험분석에 앞서 마지막으로 확인해볼만한 점은 네 가지 유형분류의 상호배타성이다.¹⁾ 정량적 연구방법에서 개념의 유형화를 시도할 때 유의해야할 점은 서로 다른 범주로 유형화된 속성들이 상호배타적이어야(mutually exclusive) 한다는 점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한 개의 범주로 유형화된 속성이 다른 범주에도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본 연구가 정의하는 네 가지 유형들은 복지연구에 대한 기존이론들을 바탕으로 추론한 유형화작업이므로 경험적으로 보면 네 가지 유형이 반드시 상호배타적이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유형화를 위해 사용한 문항인 문4-㉠, 문4-㉡와 문9-㉠이 그림1에서의 설명처럼 순차적으로 앞선 문항에 대한 응답여부에 따라 다음 문항을 묻는 방식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즉, 소득격차가 크지 않다고 응답하였기 때문에 제1유형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 문9-㉠에서는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부담에 동의한다고 답했을 경우가 있을 가능성(즉, 제4유형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뜻이다. 마

1) 유형의 개념적 타당성과 상호배타성 문제를 확인해볼 것을 제안해준 심사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찬가지로 소득격차가 정부책임이 아니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제2유형으로 분류된 사람 중에서도 문9-㉠에서는 복지확대를 위한 세금부담에 동의한다고 답했을 경우가 있을 가능성(즉, 제4유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만약 이런 응답자의 숫자가 많다면 본 연구의 유형화 개념의 내적 타당성이 낮다는 뜻이 되므로 이를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2. 경험적 분석

그렇다면 누가 왜 서로 다른 유형의 복지선호를 형성하는가? 앞서 설명한 기존연구들에 기반하여 크게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한다. 첫 번째 가설은 개인의 경제상황이다. 복지정책은 단순화하면 소득이나 실업 등 개인의 경제상황을 기준으로 국민을 구분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계층으로부터 비용을 충당하여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그러므로 개인의 소득, 취업여부나 고용안정성, 복지수혜여부 등의 개인적 경제상황은 복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복지에 대한 고전적인 이론은 저소득층, 고용시장에서 불안정성이 높은 사람들, 그리고 복지수혜자집단일수록 복지확대를 지지한다고 본다(Korpi 1983; Pierson 1996). 그러나 한국의 복지선호에 대한 연구들은 이에 대해 여전히 논쟁 중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구의 고전적 이론과 동일한 발견을 하는 연구도 있는 반면, 소득변수가 유의미하지 않거나 오히려 저소득층일수록 복지를 반대하는 계급배반적 선호를 보여준다고 주장하는 연구들도 많다(김영순·여유진 2011; 류만희·최영 2009; 모지환·김행열 2009; 박선경 2017a). 과연 네 가지 유형에서도 소득이나 고용 등 개인의 경제상황은 이런 계급배반적 특징을 보여줄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응답자의 고용상태와 응답자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였다. 고용상태는 실업자나 비경제활동인구가 아닌 어떤 형태로든

현재 직업을 가진 응답자를 1로 한 더미변수이다. 소득은 가구별 가처분소득(만원 단위)의 로그값인데, 김영순·노정호(2017, 124)가 사용한 방식처럼 $\log(\text{소득} + 1 - \text{소득최소값})$ 이라는 아핀변형을 사용해서 소득을 측정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소득값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가 분석에서 탈락되는 상황을 방지하였다.

두 번째 가설은 거시적 경제불평등 정도이다. 멜처-리처드의 고전적 이론(Meltzer and Richards 1981)에 따르면, 불평등 수치가 악화될수록 복지확대지지자가 늘어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서론에서 여러 번 언급하였던 것처럼 복지선호형성의 여러 하위 단계에서 거치는 과정에서 객관적 경제조건에 영향력은 반드시 멜처-리처드의 이론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우선, 제1유형에서 보듯이 거시적 불평등 정도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불평등 정도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유형과 제4유형에 대한 불평등의 영향력은 정반대의 이론적 기대가 가능하다. 불평등이 악화되어 국가가 복지를 확대하면 이에 대한 세금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므로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반대로 불평등 악화로 인한 여러 경제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여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복지를 확대해서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반된 가설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가구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지니계수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지니계수는 설문조사 시행 기준 전년도 수치를 사용하였다.

통제변수로 성별, 나이와 학력이다. 성별은 여성을 1로 하는 더미변수이며, 나이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리고 80세 이상이 각각 1에서부터 7까지 총 7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학력은 중졸이하를 1, 고졸을 2, 전문대 졸업을 3, 대학졸업을 4, 대학원이상을 5로 하여 총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은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3는 네 가지 복지선호 유형을 종속변수로 놓고, 위의 두 가설을 검증한 로짓 분석결과이다. 로짓분석에서 가구 단위 군집강건 표준오차(robust and household-

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했는데, 김영순·노정호(2017, 119)의 적절한 지적처럼 한국복지패널의 복지인식 조사는 동일 가구 내 여러 명의 가구원들이 표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가족구성원 간 응답의 연관성이 우려된다. 이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표준오차의 과소추정(under-estimation)문제를 줄이기 위해 김영순·노정호(2017, 119)의 조언처럼 가구 단위 군집강건 표준오차(robust and household-clustered standard error)를 사용하였다.

〈표 2〉 변수들의 기술통계량

	관찰갯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제1유형 현상적 선호유지자	9701	0.094	0.292	0	1
제2유형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	8749	0.281	0.450	0	1
제3유형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	9664	0.383	0.486	0	1
제4유형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	9664	0.268	0.443	0	1
성별(여성=1)	9705	0.570	0.495	0	1
나이	9705	4.212	1.680	1	7
학력	9705	2.042	1.182	1	5
고용상태(직업있음=1)	9705	0.599	0.490	0	1
가처분소득(log, 단위:만원)	9705	9.346	0.284	0	13.037
지니계수	9705	30.426	0.735	29.5	31.4
진보이념	9081	0.227	0.419	0	1
보수이념	9081	0.361	0.480	0	1
정부 사회정책평가	9705	3.110	0.565	1	9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9458	2.036	0.916	1	5

표3의 결과²⁾를 보면, 우선 여성이고 나이가 많고 가계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현재 한국의 소득격차가 크다고 생각하지 않았다(제1유형). 둘째, 나이가 많고

2) 표3에서 지니계수를 뺀 로짓분석 결과는 표2와 매우 유사하다. 상관계수값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변수의 유의미성이나 상관관계의 방향성은 모두 동일하다.

현재 실업자(혹은 비경제활동인구)일수록 제2유형인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일 확률이 높다. 셋째, 여성이고 나이가 적으며 학력수준이 낮고 현재 직업이 있지만 소득이 낮은 응답자일수록, 원론적으로는 복지에 찬성하지만 증세는 반대하는 제3유형인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일 확률이 높다. 마지막으로 남성이고 학력수준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소득격차의 악화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국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위한 비용부담에 찬성하는 복지지지자일 확률이 높다.

네 가지 유형별로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비교해보면, 제3유형과 제4유형 간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즉, 소득격차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비용문제에서 입장이 갈리는 이 두 유형의 응답자들이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들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취약할 계층인 여성이나 청년층, 그리고 저학력자들이어서 이들이 원론적인 복지지지입장에도 불구하고 복지비용지출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지니계수의 영향력을 보면 여러 가지 흥미로운 점이 보인다. 우선, 객관적 불평등 수치의 변화가 소득격차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흥미롭다. 이론적으로 보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지니계수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소득격차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는 아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또한 지니계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제3유형과 제4유형에서만 발견된다는 점도 흥미롭다. 지니계수가 클수록, 즉 불평등이 심할수록,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가 될 확률이 낮은 반면,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불평등이 악화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부담을 회피하려는 응답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불평등의 악화가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를 확대시켰다. 만약 앞으로 불평등이 현재보다 더 악화된다면 불평등이 제1유형이나 제2유형의 비중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겠지만, 비용회피적 반대자의 비중을 줄이고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의 비중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표 3〉 개인의 경제상황 가설과 거시적 경제불평등 가설의 로짓분석 결과

	제1유형 현상적 선호유지자	제2유형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	제3유형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	제4유형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
성별(여성=1)	0.213** (0.070)	0.065 (0.048)	0.201*** (0.042)	-0.358*** (0.045)
나이	0.163*** (0.033)	0.112*** (0.021)	-0.153*** (0.019)	0.027 (0.020)
학력	0.034 (0.046)	0.003 (0.030)	-0.113*** (0.026)	0.112*** (0.028)
고용상태	-0.112 (0.083)	-0.124* (0.056)	0.111* (0.049)	0.030 (0.055)
가처분소득	0.432** (0.165)	0.151 (0.106)	-0.192* (0.094)	-0.011 (0.094)
지니계수	-0.054 (0.052)	0.018 (0.036)	-0.218*** (0.033)	0.266*** (0.036)
상수	-5.491* (2.298)	-3.349* (1.610)	8.644*** (1.435)	-9.175*** (1.504)
Log-likelihood	-3000.4981	-5162.5631	-6344.6397	-5532.2942
N	9,701	8,749	9,664	9,664

* p<0.05; ** p<0.01; *** p<0.001

Robust and household-cluste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표 4〉 정치성향가설의 로짓분석 결과

	제1유형 현상적 선호유지자	제2유형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	제3유형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	제4유형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
진보성향	-0.511*** (0.112)	-0.279*** (0.076)	-0.020 (0.062)	0.382*** (0.067)
보수성향	-0.119 (0.085)	0.246*** (0.062)	-0.093 (0.055)	-0.090 (0.063)
성별(여성=1)	0.170* (0.073)	0.069 (0.051)	0.207*** (0.044)	-0.352*** (0.047)
나이	0.153*** (0.035)	0.085*** (0.022)	-0.146*** (0.020)	0.047* (0.021)
학력	0.051 (0.046)	0.011 (0.030)	-0.109*** (0.027)	0.096*** (0.028)
고용상태	-0.125 (0.086)	-0.125* (0.057)	0.119* (0.050)	0.021 (0.057)
가처분소득	0.423* (0.170)	0.122 (0.104)	-0.173 (0.092)	-0.004 (0.093)
지니계수	-0.011 (0.055)	0.028 (0.038)	-0.227*** (0.033)	0.252*** (0.037)
상수	-6.534** (2.398)	-3.337* (1.607)	8.722*** (1.432)	-8.914*** (1.517)
N	9,077	8,191	9,053	9,053
Log-likelihood	-2807.9953	-4775.7145	-5937.0359	-5187.8995

* p<0.05; ** p<0.01; *** p<0.001

Robust and household-cluste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복지선호유형 형성에 대한 세 번째 가설은 정치성향의 영향력이다. 복지선호는 이념이나 정당지지와 같은 정치성향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제2유형은 개

념정의상 보수자유주의 경제 이념과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며, 제4 유형은 진보적 개입주의 경제 이념과 매우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표4는 진보와 보수를 각각 1로 코딩한 두 개의 더미변수를 독립변수에 포함한 로짓분석결과이다. 표3에서 사용하였던 독립변수들의 통계적 유의미성과 상관관계의 방향성이 이념변수를 포함한 이후에도 바뀌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념 변수의 영향력을 보면, 우선 진보성향일수록 소득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함을 알 수 있다. 또 이론적으로 예상가능한 것처럼 보수성향일수록 제2유형인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일 확률이 높다.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들의 이념성향이 어느 방향으로든 유의미하지 않게 나온 점 또한 흥미롭다. 복지확대에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복지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특정한 이념성형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이론적 예상처럼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일 확률이 높다.

정치성향을 다양하게 측정하기 위해 이념성향 외에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 등 정치적 성향을 알 수 있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사용했다. 한국의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에서부터 ‘다소 불만족’, ‘만족도 불만족도 아니다’, ‘다소 만족’, ‘매우 만족’의 순서로 1에서부터 5까지 5척도로 사용되었다.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9가지 질문의 답변을 ‘매우 잘못하고 있다’에서부터 ‘잘 못하는 편이다’, ‘보통 그저 그렇다’, ‘잘 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의 순서로 각각 1에서부터 5까지 5척도로 측정하고, 이 총 9가지 질문에 대한 값의 평균값이다. 질문에서 언급한 정책영역은 ㉠ 아픈 사람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노인들이 적절한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 ㉢ 장애인의 불편을 덜기 위한 서비스

3) 한국복지패널조사가 정당지거나 투표행태에 대한 문항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를 분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제공, ㉠ 질 높고 충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 빈곤 예방 및 감소, ㉢ 실업에 대한 대응, ㉣ 성평등 수준을 높이는 것, ㉤ 모두가 위생적이고 적절한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 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교육이다.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와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에 추가한 표5의 결과를 보면, 제1유형을 제외하면 기존 변수들의 유의미성과 영향력이 표4의 결과와 큰 차이가 없다. 제1유형의 경우, 기존에 유의미했던 성별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사라졌고, 기존에 유의미하지 않던 학력변수가 유의미하게 바뀌었다.

〈표 5〉 정부평가와 정치만족도로 측정한 정치성향가설의 로짓분석 결과

	제1유형 현상적 선호유지자	제2유형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	제3유형 비용회피적 복지반대자	제4유형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
정부사회정책평가	0.235** (0.083)	0.255*** (0.058)	-0.086 (0.050)	-0.193*** (0.058)
정치상황만족도	0.291*** (0.044)	0.179*** (0.031)	-0.126*** (0.027)	-0.117*** (0.032)
진보성향	-0.426*** (0.113)	-0.217** (0.077)	-0.058 (0.063)	0.332*** (0.068)
보수성향	-0.100 (0.086)	0.271*** (0.062)	-0.111* (0.055)	-0.100 (0.064)
성별(여성=1)	0.114 (0.074)	0.019 (0.052)	0.232*** (0.045)	-0.316*** (0.047)
나이	0.122*** (0.036)	0.051* (0.023)	-0.131*** (0.020)	0.069** (0.022)
학력	0.095* (0.047)	0.039 (0.031)	-0.124*** (0.027)	0.077** (0.029)
고용상태	-0.107 (0.086)	-0.130* (0.058)	0.114* (0.051)	0.020 (0.057)
가처분소득	0.466**	0.174	-0.195*	-0.019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27

	(0.159)	(0.109)	(0.097)	(0.089)
지니계수	-0.060	-0.008	-0.209***	0.278***
	(0.058)	(0.039)	(0.034)	(0.037)
상수	-6.767**	-3.789*	8.891***	-8.778***
	(2.436)	(1.667)	(1.488)	(1.519)
Log-likelihood	-2730.4149	-4671.5099	-5845.4295	-5106.8146
N	8,958	8,087	8,935	8,935

* $p < 0.05$; ** $p < 0.01$; *** $p < 0.001$

Robust and household-clustered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정부의 사회정책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일수록 소득격차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제1유형일 확률이 높고, 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일 확률이 높고,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일 확률이 낮다. 정치상황에 대한 만족도도 같은 패턴이다. 정치상황에 만족할수록 제1유형이나 제2유형일 확률이 높아 복지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정치상황에 불만족할수록 제3유형이나 제4유형이 될 확률이 높고 복지에 우호적인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불신 혹은 정치불신을 중요한 매개변수로 보는 기존 연구들과 정반대의 함의를 가지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 연구들은 한국인의 복지선호가 낮은 이유는 복지확대 자체에 반대해서라기보다 복지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강정희·염문동 2014; 서복경·황아란 2012; 이현우 2013). 이런 관점에 따르면 정치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거나 정부사회정책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일수록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가 될 확률이 높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정치상황에 만족할수록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가 될 확률이 낮았고, 대신 제1유형, 2유형과 4유형이 될 확률은 높았다. 또한 정부사회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응답자일수록 현상적 선호유지자이거나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일 확률이 높았고,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일 확률이 낮았다. 이에 따라 기존연구들이 주장하는 정부불신효과를 향후 다소 유보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⁴⁾

V. 결론

2000년대 초반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해짐에 따라 최근 복지정책이나 복지 선호에 대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불평등 악화라는 객관적인 거시경제상황이 바뀌면 여론이 이에 반응하여 복지선호를 형성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복지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찾는 것에 집중할 뿐이다. 그러나 객관적 경제상황에서 개인의 정책선호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선적이지 않고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복지선호 형성 과정을 세분화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인의 복지선호에 대한 연구들이 선호형성과과정의 세부단계를 보다 면밀히 구분하여 세분화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러한 세분화된 연구의 첫 단계로 복지선호유형을 현상적 선호유지자, 보수이념적 복지반대자, 비용회피적 복지지지자, 비용수용적 복지지지자의 네 가지로 유형화해서 분석했다.

방법론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현상을 유형화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유형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형화 과정을 통해 구분된 서로 다른 현상들의 개별적인 메커니즘을 구분하는 데 있다. 즉, 한국인의 복지선호를 위의 네 가지로 유형화함으로써 우리는 네 가지의 각기 다른 방식의 복지선호형성 메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서 시행한 로짓분석은 이런 맥락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한계 또한 명백한데, 엄밀한 이론에 바탕해서 도출된 가설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기존연구들의 발견이 네 가지 유형화에도 적용되는지를 확인했다는 차원에서 여전히 탐색적 수준이라는 한계가 있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복지선호의 세부유형에 대한 이론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
- 4) 이러한 해석에 대해 한 심사위원은, 정부신뢰 효과의 내생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즉, 정부의 사회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일수록 정부가 이미 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불평등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거나 더 이상 정부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는 매우 타당한 지적이며 이러한 내생성 문제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13. “한국 선거에서의 ‘계급 배반 투표’와 사회 계층.” 『한국정당학회보』 12권 3호, 5-28.
- 강정희 · 염동문. 2014.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 30권 2호, 319-351.
- 강희경. 2016. “계급 정치와 ‘계층 배반 투표’: 주관적 계층 변수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110권, 38-81.
- 김사현. 2015.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41권 1호, 26-57.
- 김영순 · 노정호. 2017. “복지태도에 있어서의 세대효과.” 『한국정당학회보』 16권 3호, 109-141.
- 김영순 · 여유진. 2011. “한국인의 복지태도: 비계급성과 비일관성 문제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91권, 211-240.
- 김윤태 · 유승호 · 이훈희. 2013. “한국의 복지태도의 정치적 역동성: 탈계급성과 정치적 기회의 재평가.” 『한국학 연구』 45권, 183-212.
- 김희자. 2013. “계급계층이 복지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육변인의 조절효과 연구.” 『한국사회정책』 20권, 35-68.
- 류만희 · 최영. 2009.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도 연구: 복지의식, 계층, 자기이해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권, 191-210.
- 모지환 · 김행열. 2009. “한국인의 복지인식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동북아연구』 24권, 179-199.
- 박길성. 2011.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한국사회』 37권 3호, 1-23.
- 박선경. 2017a. “자신의 상대적 소득수준에 대한 오인과 재분배선호.” 『한국정당학회보』 16권 1호, 71-100.
- 박선경. 2017b. “한국인의 복지비용선호의 양가성: 2013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드러난 상충된 답변에 대한 분석.” 『현대정치연구』 10권 1호, 5-29.
- 서복경 · 황아란. 2012. “복지확대에 대한 국민 중심의 정책평가: 고령자정책 사례를 중심

- 으로.” 『현대정치연구』5권, 5-34.
- 신진욱. 2015. “불평등과 한국 민주주의의 질: 2000년대 여론의 추이와 선거정치.” 『한국 사회정책』22권, 9-39.
- 신진욱. 2017. “왜 불평등의 심화는 계급균열로 이어지지 않는가? 후발 민주화 사회에서 균열형성 지체의 역사적 조건.” 『민주사회와 정책연구』32권, 86-123.
- 오수진 · 박상훈 · 이재묵. 2017. “유권자의 계급배반과 정치지식: 제20대 총선에서 나타난 투표행태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51집 1호, 153-180.
- 이보운 · 김동훈. 2015. “한국의 경제적 불평등과 복지선호: 기술특정성과 국가정체성의 역할.” 『한국과 국제정치』31권 2호, 149-176.
- 이상록 · 김형관. 2013. “한국사회에서의 세대와 복지태도.” 『사회과학연구』29권 3호, 433-458.
- 이현경 · 권혁용. 2016. “한국의 불평등과 정치선호의 계층화.” 『한국정치학회보』50집 5호, 89-108.
- 이현우. 2013. “복지예산 규모에 대한 태도결정에 미치는 요인분석.” 『국제정치논총』53-2, 249-280.
- 주은선 · 백정미. 2007. “한국의 복지인식 지형-계층, 복지수요, 공공복지 수급경험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34, 203-225.
- 최균 · 류진석. 2000. “복지의식의 경향과 특징: 이중성.” 『사회복지연구』16호, 223-254.
- 최유석. 2011. “한국인의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과 분산: 정치적 성향과 정치적 지식의 역할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38, 57-83.
- 한귀영. 2013. “2012년 대선, 가난한 이들은 왜 보수정당을 지지했는가?” 『동향과 전망』10권, 9-40.
- Korpi, Walter. 1993. *The Democratic Class Struggle*. London: Routledge.
- Lewis-Beck, Micheal and Mary Stegmaier. 2000. “Economic Determinants of Electoral Outcom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3:183-219.
- Meltzer, Allan H., and Scott F. Richards. 1981. “A Rational Theory of the Size of Govern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9, No 2, 914-927.
- Pierson, Paul. 1996.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World Politics* 4, No 2,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개인의 복지선호로 이어지는가?
한국인의 복지선호형성의 세부단계에 대한 유형화 31

143-179.

Poole, Keith and Howard Rosenthal. 2007. *Ideology and Congress*. New Brunswick, NJ:Transaction Publishers.

투고일: 2018.10.15. 심사일: 2018.11.22. 게재확정일: 2018.12.03.

How does Economic Inequality link to Individual Preference on Welfare Policy? A Typology of Welfare Policy Preference Formation in Korea.

Park, Sunkyong | Incheon National University

Lee, Nae Young | Korea University

Will economic inequality influence individual welfare policy preferences? If so, how? Despite various studies on rising economic inequality in Korea since 2000s, no study has analyzed logical chains from national economic inequality to individual welfare policy preferences. Using 3 waves of Korean Welfare Panel Data in 2010, 2013 and 2016, this study analyzes opinions on welfare policies and makes four types of welfare policy preferences. The first type consists of those who do not recognize the rising trend of economic inequality. The second type is the survey respondents who recognize the rising trend of economic inequality but who do not think the government should solve it. The third type consists of those who recognize inequality, agree with the governmental responsibility to solve inequality, but oppose tax increase for welfare expansion. The fourth type is the survey respondents who recognize inequality, agree with the governmental responsibility to solve it and support tax burden for welfare expansion. Using these four types, empirical analysis tests personal economic condition hypothesis, national economic inequality hypothesis and political leaning hypothesis in order to identify different features of four types.

Key Words | welfare preferences, economic inequality, typology of welfare preferences, Korean Welfare Panel Survey